



한반도 긴장을 보는
국제주의 관점

2~3면

윤석열을
'악마화'하지
말라고?

5면

민주당의
윤석열 신년사
비판에서 빠진 것

7면

서해 공무원 파살
사건을 둘러싼
국힘의 위선

4면

노동시장
이중구조론의
문제들

6~7면

다시 보는
드레퓔스
사건

12~13면

2023년
경제 전망

8~10면



한반도 긴장은 미·중의 강대강 대결 때문

한국 정부도 사태 악화에 일조하고 있다

관련 기사 2~3면

한반도 긴장을 보는 국제주의 관점

김영익

최근 한반도 상황에 관해 우려스러운 소식이 연일 나온다. 전쟁 위기는 분명 아니지만, 긴장이 쌓이고 있다.

무인기 사태에 이어, 1월 1일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로동당 총비서 김정은이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대륙간탄도 미사일 개발, 전술핵 등 핵무기 다량 생산, 정찰위성 발사 등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이를 동안 북한은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방사포를 시험 발사했다.

앞서 지난달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와중에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의 핵무기 연습에 관심을 보이는 데다가, 3월에 상륙훈련을 포함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도 하겠다고 예고했다.

남·북한 정부들의 계획대로라면 올해 한반도의 긴장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상황을 두고 남북 두 정부의 “강대 강” 대치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크다. 문제는 (정당한 우려임에도) 남북 모두의 호전적인 보수 강경파가 문제라는 흔한 인식이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이 중대한 문제지만 “일부 보수층”의 요구에 따르는 윤석열 정부의 강경 대응도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행보를 비판하는 어조가 더 강하다. 최근 북한의 행보는 “[신냉전이라는] 국제 정세를 활용해 중국과 러시아를 방패 삼아 핵·미사일 개발에 매진하겠다는 의도”이며, 그래서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태”라는 것이다(〈한겨레 1월 2일자 사설〉).

지난해 11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해 자신감을 얻어서 어제의 북한과는 달라졌다고, 북한이 “국가 나르시즘”에 빠져 앞으로 “더 대담한 전략적 도발”을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북핵과 한반도 상황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미·중 간 제국주의적 경쟁이 계속 점증하고 있는 더 큰 맥락 속에서 봐야 한다.

아시아판 나토

위에서 언급한 조선로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보고에서 김정은은 북한이 처한 대외 환경에 관한 관점을 직설적으로 밝혔다. “국제 질서는 신냉전으로 명백히 전환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들어 각종 핵타격수단



조선로동당 제공



조선로동당 제공

경쟁적으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는 남과 북

을 남한에 상시 배치 수준으로 들이밀고 있다. 한·미·일 삼각 공조를 본격 추진하며 아시아판 나토 형성에 골몰한다. ... 남한은 무분별한 군비 증강에 광분했다.”

북한 지도층이 커다란 대외적 압력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준다.

기자가 여러 기사를 통해 설명했듯이, 미국과 중국 간의 제국주의적 경쟁은 인도-태평양에 커다란 불안정을 조성할 뿐 아니라 한반도에도 직접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미국과 중국 간의 제국주의적 경쟁이 현재 어떻게 심화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지난해 8월 대만을 둘러싼 긴장 고조는 미·중 갈등이 안고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톺아 보여 줬다.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가 대만 방문을 강행하자 중국은 반발해,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 훈련을 벌였다. 이후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군을 대만에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공급망 재편을 시도하는 것도 갈등을 키우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잇달아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놓았고, 중국에 반도체 투자와 핵심 장비 수출을 하지 말라고 동맹국과 그 기업들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주요국들이 반도체 전쟁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경쟁적으로 신규 투자를 하는데, 정작 올해 반도체 경기 전망은 어렵다. 그러면 반도체 경기 후퇴로 생긴 손실을 경쟁자에게 떠넘기려는 쟁투가 더해져 제국주의적 갈등이 더 악화될 것이다.

이러한 미·중 갈등은 몇 가지 매개를 통해 한반도 긴장에 영향을 준다. 우선, 대만과 남중국해 등지에서 벌어질 미국과 중국의 충돌에 한반도가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대만해협에서 충돌이 벌어지면, 주한미군 기지와 제주해군기

지 등은 대만으로 가는 미군의 발진 기지가 될 것이다. 대만 문제를 놓고 미국은 한국의 더 많은 기여를 바란다.

또, 미국은 한·미·일의 군사 협력을 증대하고 군사력을 전진 배치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고, 여기서 북한 ‘위협’은 미국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유용한 명분이다. 지난해 11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북한 ‘위협’이 지속되면 역내 미군 주둔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바이든이 시진핑에게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들은 ‘확장 억제’(핵무산)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개념)를 강화하고,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북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미·일 연합훈련도 강화하고 있다.

3국의 이런 행보는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도 겨냥한다. 동해에서 벌어지는 한·미·일의 미사일 대응 훈련과 서해 군산으로 날아오는 미군의 전략 자산이 모두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자극하는 것이다.

이 같은 미·중 갈등이 한반도 긴장의 가장 주된 원인이다. 특히, 그 속에서 진행되는 한·미·일의 대북 압박이 지금 긴장을 높이고 있다.

다른 한편, 북한 관료들은 미국의 동맹 강화와 군사력 배치, 일본의 군비 증강 등이 가하는 압력에 핵·미사일 능력 강화로 대처하고 있다.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한국을 “명백한 적”이라고 지칭한 것도 앞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군국주의 강화는 상황 악화에 일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전반적 긴축 기조하에서도 국방예산만큼은 크게 늘렸다.

윤석열은 또한 무인기 사태처럼 북한이 영토를 또 넘어오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놔다.

물론 미국과 중국이 당장 한반도에 전쟁이 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제국주의적 갈등이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를 악화시키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훗날 어떤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 3면으로 이어짐



사진 출처: 대통령실

한미일 동맹은 동아시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핵심 축이다

▶ 2면에서 이어짐

안보 무능?

1월 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대응을 비판하며 평화적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평화 유지를 강조하나, 일관되지 않고 위선적이다. 무인기 사태에 대해 민주당은 주로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을 탓했다. 이 대표도 윤석열 정부를 ‘안보 대응 태세가 부실한 안방 여포’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안보 무능’ 강조에는 강하고 효율적인 국방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 마찬가지로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국방예산 증액을 문제 삼지 않은 까닭도 여기에 있다.

강한 국방을 위한 노력은 결국 문제가 된다. 북한·중국 등 주변국을 자극해 불안정 증대에 일조하기 때문이다.

정의당도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북한 무인기 격추에 실패한 정부의 허술한

대처와 군의 무인기 대응 전력 미비를 질타했다.

물론 정의당은 한·미·일 동맹 강화와 남북 군사합의 중지 거론 등 윤석열의 강경 행보를 옳게 비판한다. 하지만 현 상황이 “남북 위정자들의 강 대강 대결 구도”에서 비롯됐다는 게 그 비판의 기본 전제다. 이런 대칭적 양비론으로는 ‘우리’ 정부의 친제국주의와 군국주의를 단호하고 일관되게 반대할 수 없다.

장혜경 노동당 정책위 의장은 한미 동맹을 옳게 비판한다. 그런데 “쌍중단”(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북한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북한 핵과 미국 핵을 모두 반대하는 노동자 민중의 반핵-반전 목소리”를 “한반도 위기 해결의 시발점”으로 제시한다. “[핵 사용 문턱을 낮춘] 핵정책법령을 채택한 올해의 북한은 [과거와] 다르다”는 인식이 이를 뒷받침하는 듯하다.

모든 핵에 반대하는 것은 원칙상 옳다. 그러나 이를 추상적 원칙을 넘어 구



사진 출처: 조선중앙통신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지 않고자

체적 전술·전략으로 채택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평화주의로 안내하는 이런 노선은 “진정한 적이 국내에 있다”는 점을 흐려 자국 정부의 군국주의에 우선적으로 반대해야 한다는 점도 흐린다.

북한 핵과 미국 핵을 대등한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둘 다에 반대한다는 슬로건은 내년 총선에서 다수 유권자의 평화주의 정서에 당연한 호소력을 가

질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호한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방침으로는 ‘우리’ 정부에 반대할 급진적이고 능동적인 부분을 결집시킬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의 좌파는 서로 경쟁하는 제국주의 강대국들 중 어느 한 쪽을 지지해서는 안 되고 둘 다에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지배자들이 협력하는 미국 제국주의,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친제국주의에 우선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문재인 정부의 월북 단정은 잘못, 그러나 윤석열의 위로는 악어의 눈물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벌어진 공무원 이대준 씨 피격 사건 관련 혐의로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관료 몇 명이 공판에 회부됐다.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서훈이 구속됐고, 당시 국정원장 박지원과 당시 국방부장관 서욱이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의 줄거리는 이렇다: 사건 당시 이대준 씨는 연평도 근해를 관리하는 어업지도선에 탑승해 있었다. 이 어업지도선의 임무는 남한 어선들이 NLL(북방한계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중국 어선 등이 남한 영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이대준 씨가 이 배에서 이탈해 북한 영해에서 북한 군인들에 의해 사살됐다. 그래서 논란의 핵심은 이탈 경위를 둘러싼 진실 다름이다.

이대준 씨 피격 직후 문재인 정부는 이 씨가 월북을 시도했으나 북한군이 이를 막고 사살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찰은 이와 다르게 보고 있다. 월북 시도가 아니라 단순 실족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훈이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본부 간부들에게 보안을 유지하라고 지시한 것이나 박지원이 첩보 자료 삭제를 지시한 것은 모두 직권남용에 의한 진실 은폐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위선을 또다시 드러낸 사건이다. 하지만 역대 우파 정부가 탈북민들에 대해 취한 정책과 태도는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억압적 국가기관들을 더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이대준 씨의 비극적 사건을 활용했다

여전히 사건의 실체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검찰이 직접 실험까지 했지만, 월북이 아닐 가능성을 무시한 것이 잘못임을 반증한 수준이다.

이대준 씨가 실족해 표류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단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가 재판 과정에서 입증될지는 불투명하다.

게다가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당시 미군과 한국군의 대북 첩보 자료를 갖고 다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판단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이대준 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 문재인 정부가 월북 시도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대북 관계에 악재가 될까 봐 우려했든, 자국민의 피격·사망을 방치한 책임을 피하려고 했든, 이 사건을 사망한 공무원 개인의 월북 시도 탓으로 돌린 것은 잔인한 짓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월북자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유가족들에게 평생 안겨 줄 엄청난 고통을 생각하면 그렇다.

남북 관계를 고려했더라도, 남북 관계가 누구를 위해 평화로워야 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평범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재인 정부의 언행이 위선적이었음을 또 한 번 보여 줄 뿐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 사건을 이용해 자신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선량한 시민을 위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도 역겨운 위선이다.

낡은 기종의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비행했다고 해서 전투기를 출동시키고, 대통령이 나서서 확전을 각오하고 보복 대응하라고 지시하고, 북한 무인기를 서울 주거 밀집 지역 상공에서 폭파시키지 못해 아쉽다고 말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처사인가?

납북어부 간첩 조작

납북 귀환 어부들이 지난해 말 ‘동해안 납북귀환어부피해자 진실규명 시민모임’을 결성해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요청했다.

납북 귀환 어부는 과거 군사 독재 정부 시절에 북한에 납치되거나 태풍 등으로 월경해 북한에 억류됐다가 돌아온 어부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간첩으로 조작돼 감옥에 갇히는 등 평생 고통을 받아 왔다.

그런데 지난해 말 윤석열은 뉴라이트 김광동을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했다. 그는 1980년 5월 광주 항쟁에 대한 북한 개입설을 “가능성 있는 의혹”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런 자가 과거 군사 독재 정권의 납북 어부 간첩 조작 사건

의 진정한 해결에 관심이 있을까.

정부·여당은 동해를 통해 귀순했던 북한 이탈 어민들을 문재인 정부가 강제 북송시켜 버린 사건도 대(對) 민주당 공세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물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위선을 또다시 드러낸 사건이다.

하지만 역대 우파 정부가 탈북민들에 대해 취한 정책과 태도는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다. 이명박은 탈북민의 국내 수용을 거부하고, 탈북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하거나 첩보원으로 활용했다.

박근혜는 재북 화교 출신 탈북민 유우성 씨와 또 다른 탈북민 홍강철 씨를 간첩으로 조작했고, 윤석열은 이 조작 수사의 책임자 이시원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사실 윤석열 정부는 이대준 씨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국방부·국정원 등에서 전 정부 관련 인사들을 숙청하는 데 활용했다. 비극적 사건을 이용해 억압적 국가기관들을 더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활용한 것이다.

이런 정부·여당이 이대준 씨 유가족의 억울함을 이용해 “국민 생명 보호” 운운하는 것은 역겹기 짝이 없는 일이다.

김문성

윤석열을 “악마화”하지 말라고?

악랄하고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체제의 지도적 수호자를 그렇게 규정하는 게 큰 잘못인가?

최근 강준만 교수가 민주당의 ‘윤석열 악마화’를 비판하는 책을 출간했다. 그러자 보수 언론들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강준만 교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을 적으로 간주한 것은 물론이고, 최악의 적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지지자들까지 가세해 ‘악마화’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설사 윤석열을 악마화한들 그것이 왜 문제인가? 윤석열이 노동자 등 광범한 대중에게 경제 위기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친제국주의적 호전성을 드러내는데도?

온건 좌파 일각에서도 윤석열 ‘악마화’를 문제삼는다. 나경채 정의당 전 대표는 지난해 말 자신의 SNS에 이렇게 쓴 바 있다.

“우리 시대의 병적 징후들은 ... 기득권 정당들[국민의힘과 민주당 - 인용자]이 기존의 도그마를 수정하지 않고, 오직 좁은 의미의 정치진영의 이익에만 골몰하는 내로남불 현상이 그 첫째요, 상대를 악마화하고 우리를 천사화해서 악마대단결과 천사대연합 외에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서도 안된다는 아집과 독단이 그 둘째다. 이런 병적 징후들의 바깥에 존재한다고 스스로 믿지만 어떤 새로운 세력 구상도 내지 못하고 비판의 무기만 쏘아대는 진보좌파 세력의 무능이 그 셋째 정도는 되지 않은가 생각해 본다.” (2022년 12월 2일자)

위에서 보듯이, 정의당 내 ‘전환’계는 한국 정치의 상대편 악마화 행태가 양당 이분법적 진영논리를 강화해, 정의당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는 듯하다. ‘전환’계 친화적인 매체 <레디앙>은 한때 좌파였지만 대선에서 윤석열

윤석열 악마화를 문제삼는 것은 국가를 중립적인 것으로 오해하고 적을 적으로 보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난쏘공》을 읽는다고 ... 이정미 정의당 대표(사진 오른쪽)가 《난쏘공》을 선물하는 장면은 고통 받는 대중의 눈에 어떻게 비쳤을까?

을 지지하면서 윤석열 “악마화”를 비판해 온 한지원 씨의 칼럼을 읽고 있다.

지난해 이은주 당시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재명이 국민의힘을 “광주 학살 세력 후예, 군사정권의 후예”라고 비난한 것을 두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증오 정치”라며 오히려 민주당을 비판했었다. “경쟁하는 정당과 지지자는 악마의 후예가 아니라 ... 동료 시민입니다.”

물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모두 명시적으로 자본주의를 수호하는 정당이다. 민주당은 지난 세 번의 집권 내내 그런 본질을 분명하게 보여 줬다.

그러나 어떤 주장이든 때와 상황의 적합성을 따져야 한다. 지금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층에게는 국가의 일상 집행부를 운영하며 경제 위기 고통 전가 공격을 시작한 윤석열이 악랄하고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지도자이다.

윤석열은 경기 침체의 시기에 인건비 등 비용 절감이 절실한 기업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윤석열은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 대중에게 전가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로 이미 고통이 극심해지는 상황에 말이다. 그레 놓고는 노동자들을 “기득권” 세력 취급한다.

그러나 화물연대 파업 때 한 화물노동자는 정부의 무지막지한 탄압에 “윤

석열을 땅에 묻어버리고 싶다”면서 울분을 터뜨릴 만도 했다.

윤석열 악마화를 문제삼는 것은 국가를 중립적인 것으로 오해하고 적을 적으로 보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며칠 전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윤석열에게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선물하는 장면은 고통 받는 대중의 눈에 불췌사나왔다.

도대체 정의당은 누구 편인가? 고통 받는 가운데 저항하고자 하는 일부의 지지를 받고는 싶은 건가? 아니면, 방화지정 속에서 어부지리나 얻고자 뒤편 잡고 기회나 보는 그 유명한 “극단적 중도”가 되고자 하는가?

누구를 대변하려 하는가?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광범하고, 이런 정서의 일부가 윤석열 퇴진 운동으로 표현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악마화’를 문제삼는 것은 정의당과 ‘전환’계가 누구를 대변하고 누구한테서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지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각종 여론 조사에서 윤석열 반대 정서가 60퍼센트에 육박하는데도 제1야당인 민주당 지지가 오르지 않는 것은, 민주당이 윤석열을 ‘악마화’해서 아니라 일관되게 반대하지 못하면

서 대안적 세력 구실을 못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직후 코너에 몰렸던 윤석열의 숨통을 틔워주는 구실을 했다. 또, 민주당은 현행 안전운임제 유지라도 얻어 내자며 화물연대 투쟁에 찬물을 끼얹었다.

정의당 지도부는 몇몇 문제에서 민주당을 비판하긴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들에서 — 민주당이 배신적으로 화물연대 파업을 종료시킨 것,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로 지엽말단에 사법적 책임 물으며 윤석열의 정치적 책임을 흐려 버린 것 — 민주당과 공조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공격에 맞서려면 윤석열 퇴진 투쟁과 생계비 저항을 서로 연결시켜야 한다.

윤석열 ‘악마화’ 문제삼기는 그런 과제 수행을 방해한다. 윤석열 악마화에 대한 비판에는 이런 좌파적 취지가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을 비판할 때도 윤석열 ‘악마화’ 또는 윤석열 퇴진 주장과 차별화해야 한다는 자기 제약이 작용해서 급진성도 제약 받는다.

결국 국회가 소모적인 갈등(정쟁)을 멈추고 머리를 맞대 ‘민생’ 위기를 해결하자는 식의 협치론 비슷한 주장으로 기울기 십상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타파?

윤석열의 노동 개악은 노동계급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연일 노동 개악을 외치며 노동 유연화, 임금체계 개악, 쟁의권 공격 등을 강하게 밀어붙이려 한다. 안 그래도 치솟은 물가·금리로 허리 휘는 노동자들의 임금 몫을 더 줄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윤석열과 사용자들은 박근혜의 ‘정규직 과보호론,’ 노무현의 ‘노동 귀족론’을 재탕하고 있다. 대기업·정규직의 ‘기득권’이 “미래 세대의 운명”을 좁혀 “노동시장의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한다”고 비난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기득권자들의 구역질 나는 적반하장이다.

노동자 등 서민층이 역대 최대 규모의 가게 부채로 빚더미에 앉았는데, 50대 대기업들은 사내유보금만 1000조 원 넘게 쌓아 두고 있다. 그런데도 이번에 또 법인세를 감면 받았다.

대기업 임원 등 근로소득 상위 0.1퍼센트의 연평균 급여소득은 중위 소득자의 28.8배에 이른다(2020년 기준). 종합소득으로 따지면, 최상위 0.1퍼센트와 중위 소득자 간의 격차는 무려 236배나 된다(2019년 기준). 자산 격차는 이보다 더할 것을 생각하면, 진정한 불평등의 분단선은 계급 간에 존재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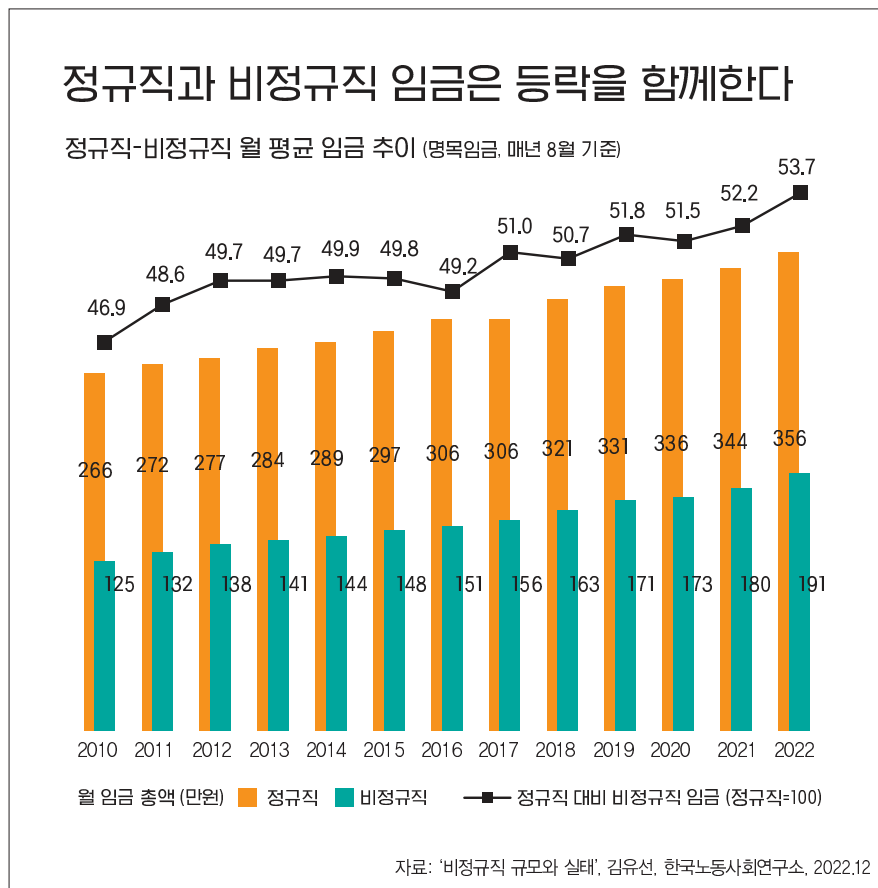
정부와 사용자들의 비난은 이런 계급 불평등을 가릴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엉뚱한 데 떠넘기려는 수작이다.

지금 윤석열은 강경하게 말을 하지만, 노동자 전체를 한꺼번에 상대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단결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각 개격과 하려고 야비한 이간질에 나선 것이다.

이간질 시도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문제라며 마치 중소기업 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이 정규직 탓인 양 호도하고 있다. “선택받은 소수”의 정규직이 좋은 일자리를 독차지해 “배제된 다수”의 미조직·비정규직이 열악한 조건에 몰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1997년 경제 공황 이후 정리해고제·파견제를 도입해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하고 노동 빈곤층을 늘린 것은 정부와 사용자들이었다. 그들은 경



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며 착취를 강화해 왔다.

물론 노동자들 사이에 격차가 벌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대기업·정규직이 청년·비정규직의 기회를 빼앗은 결과가 아니다. 대기업 정규직 한 명이 일자리를 두 개, 세 개를 차지하며 독점이라도 했던 말인가?

지난 20여 년간 사용자들은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줄여 왔다.

게다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격차, 산업구조 변화, 산업·기업 간 생산성 격차 등 더 근본적인 문제들을 봐야 한다. 일부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대적인 안정성과 고임금은 노동조합의 조직력 덕분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지난해 대우조선 하청노조의 파업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단면을 보여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도 참이 아니다.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규직과 하청 노동자 모두 인원이 줄고 임금 수준이 하락했다.

정규직 노조 지도부의 거둬들인 양보와 불필요한 타협이 그런 결과를 낳

다. 정규직의 조건 악화를 얻어낸 사용자 측은 하청 노동자들에게도 무차별 공격을 퍼부었다. 자기 조합원의 조건도 못 지킨 정규직 노조 지도부가 하청 노동자에 연대할 리 만무했다. 그 결과는 양측 다 나빠지면서도 노동자 간 격차는 유지·확대되는 것이었다.

이런 사실은 대기업·정규직의 조건 악화가 미조직·중소·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좋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는커녕 양측 모두에게 역효과를 낼 뿐임을 보여 준다.

정부는 유노조·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득권’을 깨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전체 노동자들을 향하고 있다.

가령 연구회는 노동 개악을 쉽게 관철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제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동의 주체를 손보라고 주문했다. 이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처지인 미조직·중소·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 최소한의 노동법 보호조차 박탈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회가 내놓은 최저임금 억제, 주휴수당 삭감, 파견법 개악 등은 말할 나위도 없다.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를 직접적으로 악화시킬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노동 개악이 실질적 위협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잘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은 단체협약을 통해 조건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노동 개악의 경험들은 단협만으로 조건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도 보여줬다. 노동자들 전반의 조건이 악화되면 조직 노동자들도 압박을 받게 되고, 온건한 노조 지도자들이 그 점을 이용해 불필요한 타협에 나서기도 했다.

게다가 정부가 공공부문에서부터 임금체계 개악과 인력 감축을 추진하려는 것이나 쟁의권 등을 공격하는 것은 조직 노동자들을 직접 겨냥한다.

노동계급의 이해관계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안정적 ‘내부 노동시장’과 불안정한 ‘외부 노동시장’으로 분절돼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졌다는 주장이 노동운동 내에서도 유행이다. 다양한 버전이 있기는 하지만 좌파의 상당 부분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론, 정규직 특권론을 노골적으로 또는 은연중에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일단 실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하청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는 서로 대립되지 않는다. 한 부문의 조건 상승이 다른 부문의 조건을 희생시키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동반 상승하고 하락한다(그래프 참조). 특히 잘 조직된 노동자들이 싸워서 성과를 내면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싸울 자신감을 줄 수 있다.

암묵적으로 정규직 특권론을 받아들이면, 그 노동자들의 조건 방어를 꺼리거나 심지어 해로운 것으로 여기기도 쉽다. 그래서 정부의 ‘기득권 개혁’ 논리에 일관되게 반대하기도 어렵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악 때에는 ‘공적연금 강화’를 내세워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를 흐리거나, 통상임금은 비정규직에게 그림의 떡이므로 그 대신 최저임금 인상을 걸고 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었다. 부당하게 요구를 대립시켜 당면한 정부 공격에 맞서길 회피한 것이다. 이는 결국 투쟁의 질곡으로 작용했다.

▶ 7면으로 이어짐

민주당이 윤석열 신년사 비판에서 말하지 않은 것

윤석열은 1월 1일 신년사에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노동 개악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맨 먼저 타파해야 할 ‘기득권’ 세력으로 노동조합을 꼽았다. ‘기득권’을 깨기 위해 노동 쟁의를 “법치주의”로 다스리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투쟁에 나선 대표적인 노동자들만 해도 화물 운송 노동자,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이다. 열악한 조건에 시달려 온 그들은 실질임금 하락으로 특히 큰 타격을 입었다. 그래서 최소한의 생계를 지키려고 사용자들에 맞섰다. 이게 기득권인가?

임금 개악 반대가 기득권이라는 것도 억지다. 연공급제에서 직무급제로의 임금 개편은 임금 비용을 줄이려고 사용자들이 2000년대부터 집요하게 추진해 온 것이다. 이 사용자들이야말로 진정한 기득권 세력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이 윤석열 신년사를 비판하며 던진 반문에 공감했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가진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과 정부 여당 아닌가?”

정말 맞는 말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비판에는 자본가 계급이라는 더 넓은, 진정한 기득권 세력이 빠져 있다.

윤석열의 핵심 관심사는 경제 침체 속에서 자본가들의 이윤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금, 고용, 연금 등



윤석열의 고통 전가 선언 윤석열은 물론 민주당도 문제삼지 않는 자본가 계급의 이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자 대중의 삶을 공격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윤석열 신년사 비판에서 기업인과 사용자들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민주당도 이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이들의 지지를 구하기 때문이다.

실은 전임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이 강조한 직무급제 개악을 추진했었다.(관련 기사: 본지 260호,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직무급제는 공정한 임금체계인가?’)

그래서 민주당의 ‘3대 개혁’ 비판은 “국민적 합의” 없는 “불통” 방식 비판에 치중돼 있다. 민주당의 반쪽 비판과 달리, 노동자 등 서민층이 경제 위기의 대

가를 치러야 할 이유는 없다.

같은 이유로 윤석열이 신년사에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에도 민주당은 반대해야 했다.(민주당 뿐 아니라 안타깝게 정의당도 윤석열 신년사 비판에서 이를 다루지 않았다.)

친제국주의

윤석열은 또한 신년사에서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할 대책으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경제적 연대를 하겠다고 말했다.

“보편적 가치” 연대는 지난 12월

28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자체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도 제시된 친제국주의 정책이다. 중국을 포위·견제하려는 미국-일본과 안보뿐 아니라 경제에서도 협력을 증진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옳게 반문했다. “제1교역국인 중국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경제적 필요 때문에 한국 경제는 미·중 갈등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다. 그런 모순 속에서 윤석열도 앞뒤 다른 말들을 한다.

그럼에도 한·미·일 협력 노선 강화를 표방하는데, 이는 한국이 지정학적 불안정과 동아시아 군사 경쟁 격화에 일조하는 위험한 일이다.

윤석열이 신년사에서 수출 대책으로 제시한 원전·방산 수출 확대는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특수를 누려 보려는 것이다.(관련 기사: 본지 443호, ‘방산 수출 붐: ‘죽음의 수출’에 열 올리는 윤석열’)

그러나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제국주의 간 전쟁의 확전 위험에 일조하는 것이다.

노동자 등 서민 대중이 윤석열의 전방위적 개악에 맞서려면 민주당과 달리 친기업·친제국주의 노선에 일관되게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개악 반대 목소리들이 서로 연결돼야 한다.

김승주

▶ 6면에서 이어짐

지금도 가령 정의당은 윤석열의 노동 개악에 반대하면서도 임금체계 개악은 명확하게 반대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 그 왼쪽의 일부 좌파도 임금 개악을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거나, “직무성과급제나 호봉제냐는 무의미하다”면서 “임금체계가 없는 저임금 업종에서 임금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임금체계 개악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사용자들이 강력하게 원하기 때문이다. 정규직의 임금 방어를 회피해서는 노동 개악 저지 전선을 굳건히 하는 데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

임금체계 개악이 대기업 정규직만을 겨냥하는 것도 아니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상대적 고임금을 억제해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들은 지난 몇 년간 투쟁해 호봉제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근속 수당을 따내며 임금을 올렸는데, 그 노동자들에게 임금체계 개악은 그저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물론 좌파들이 미조직·비정규직 등 차별받는 노동자들을 위한다는 취지는 좋다. 그러나 노동시장 이중구조론은 그 취지를 실현하는 데 비효과적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위치에 따라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갈린다고 보면, 다양한 노동자 집단 사이의 ‘갈등’ 조정을 중요한 문제로 보게 된다. 이런 시각은 개악 반대 투쟁보다 내부 격차 축소를 위한 제도적 대안(산별교섭 제도화 등)을 중시하는 노동조합 관료층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

무엇보다 문제는, 조직된 노동자들이 가진 힘을 자신과 더 열악한 노동 대중의 조건을 함께 방어하는 데에 사용

하도록 연결시키기보다 각자도생과 파편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는 의도치 않게, 정부의 개악 공세에 단호하게 맞서거나 차별받는 노동자들에 연대하기를 회피하는 온건한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마음 편하게 만들어 준다. 그런 파편화는 부문주의를 정당화하는 알리바이가 될 테니 말이다.

사실 지난 수년간 노동운동은 점점 더 파편화가 심화돼 왔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연대 회피와 소심함이 문제를 악화시켰다. 그 결과로 조장된 파편화는 다시 연대 회피를 정당화하는 알리바이가 된다. 일종의 악순환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사실상 삭감될 때에도,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이나 화물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에도 이런 문제가 거듭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 공세가 광

범한 노동 대중을 겨냥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 지도부들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마르크스는 노동자들 사이에 조건 차이가 있을지라도 모두 자본으로부터 착취당한다고 봤다. 이런 동질적 이해관계 때문에 착취에 맞서 단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자 투쟁의 역사는 이런 일이 가능함을 보여 줬다.

지금 경제 위기가 심화하면서 정부와 사용자들의 공격이 일반화하는 상황은 투쟁이 정치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가능성은 결코 자동적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정부의 이간질과 각개격파 시도에 맞서 서로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의 투쟁을 연결시키고 단결을 추구하는 정치가 중요하다.

박설

2023년 경제 전망

경기 침체 심화와 서민 뜯는 윤석열 정부

강동훈

이 기사는 1월 4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의 발제를 다듬어 발표하는 것이다.



영상 보기

윤석열 정부를 비롯해 주요 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퍼센트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5.1퍼센트),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0.8퍼센트), 코로나 팬데믹 초기인 2020년(-0.9퍼센트) 등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주로 세계경제가 침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 침체의 원인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 팬데믹과 미중 간 경제 갈등에 따른 공급망 차질, 중국의 부동산 시장 급락 우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곡물 가격 상승 등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는 최근 이렇게 전망했다.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3대 경제대국이 동시에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새해는 지난해보다 더 힘들 것이다.”

세계 경제 침체는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수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한국의 수출은 이미 감소세에 들어갔다. 지난해 10월 5.8퍼센트 감소, 11월 14퍼센트 감소한 데 이어 12월에도 9.5퍼센트가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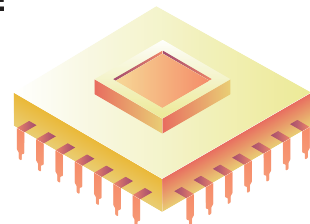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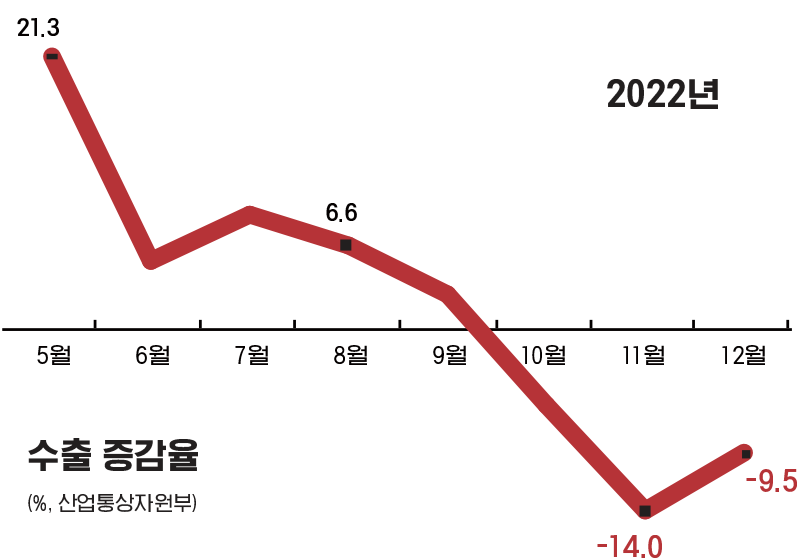
특히, 한국 수출의 5분의 1을 담당하는 반도체 수출이 크게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올해도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이 4.5퍼센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감소와 투자 부진으로 올해는 고용도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취업자가 올해 1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인 80만 명 안팎과 비교해도 대폭 낮아진 수치다.

그런데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노동자 등 서민층의 실질소득은 이미 크게 줄었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해 3분기에 노동자(도시근로가구)의 실질소득은 4.7퍼센트 줄었다. 이는 2008년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3분기(3.1퍼센트) 이후 가장 큰 하락이다.

서민층 대증은 이미 금융 위기 수준의 생활고를 겪은 것이다. 줄어든 일자

한국 수출 하락 지속



반도체 수출 15% 감소 여파로

전체 수출 4.5% 감소 예상

리를 두고 올해 경쟁이 더 강화되면 임금 억제 압박은 더 커질 수 있다.

부동산 시장 급락과 건설·금융 위기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퍼센트대로 예측하는 것조차 사실은 최근 커지고 있는 금융 위기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낮은 금리에 기대어 부채를 쌓아 가며 성장률을 끌어올려 왔다.

그러나 그렇게 쌓인 부채는 최근 위기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특히, 주택 가격 하락이 금융 위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거기에 투자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도 연쇄적으로 부실해져 금융 위기가 터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건설사들의 부도 위험이 매우 커졌다. 국토부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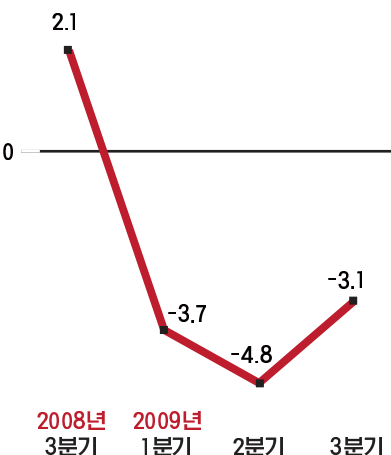
사를 보면, 지난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 8027가구로, 한 달 사이에 1만 810가구나 늘었다. 미분양 주택이 한 달 새 1만 가구 넘게 증가한 것은 2015년 12월 이후 6년 11개월 만이다.

이미 연말에 미분양 주택 수는 7만 가구가 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10만 가구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소규모 아파트 단지와 오피스텔, 건설사들이 은폐한 미분양 물량까지 고려하면 실제 미분양 주택 수는 훨씬 많을 것이다.

미분양 주택 증가에 따라 이미 몇몇 중소 건설회사들은 부도가 났고, 위기는 대형 건설사로도 확산되고 있다. 최근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롯데건설, 태영건설, 한신공영 등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낮췄다.

롯데건설은 지난 연말에 계열사들로부터 대출과 유상증자 등으로 1조 1000억 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2009년 금융 위기와 2022년의 도시 근로자 가구 실질 소득



(통계청, 단위: %)



롯데건설이 올해 1분기까지 갚아야 할 PF 관련 부채가 3조 4000억 원에 이르지만, 보증을 선 PF 사업장 중 4분의 3은 아직 착공도 못 한 상태라고 한다. 롯데건설이 금융 시장에서 자금을 빌리기 힘들므로 계열사들이 추가 지원을 해야 할 수 있고, 이는 롯데 계열사 상당수를 부실하게 만들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건설사에서 시작된 위기가 부동산 사업에 자금을 댄 증권사와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전이될 위험이다. 2008년 금융 위기 직후인 2010년에도 PF 부실이 저축은행들의 대규모 파산을 촉발한 바 있다.

이번 위기가 금융 시장에 미치는 위험은 2010년보다 클 수 있다. 2008년에는 전체 부동산 PF 대출 76조 5000억 원 중 제2금융권은 24조 원 정도였다. 하지만 2022년 6월 말에는 전체 PF 대출 112조 2000억 원 가운데 제2금융권은 83조 9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정부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한 은행권의 PF 대출은 감소했지만, 제2금융권 전반에서는 PF 대출이 급증한 것이다.

은행보다 취약해지기 쉬운 제2금융권의 PF 대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금융 불안정성은 더욱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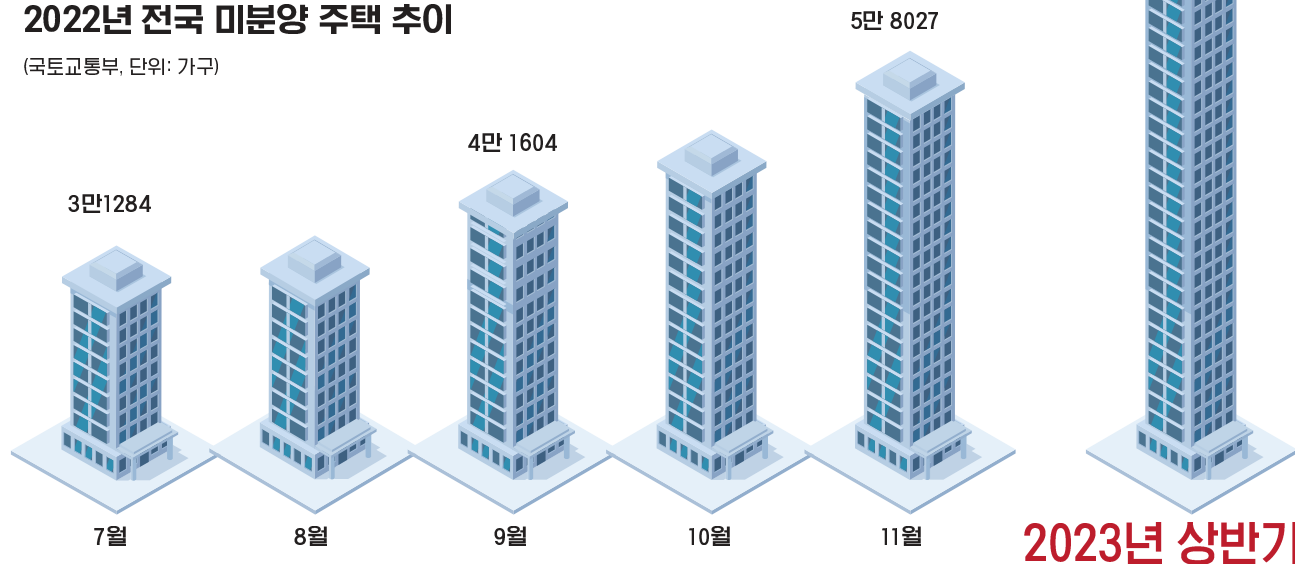
그나마 사정이 나은 보험사들과 대형 증권사들은 보유한 채권을 내다팔고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자금을 빌려서 PF 관련 대출을 메우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이 채권을 내다팔수록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금리 인상). 그리고 이는 다시 금융회사들이 돈을 빌리기 어렵게 만든다.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위태로운 부동산 시장 - 미분양 급증 건설사 위기, 금융 시장으로 확산될 위험 커

10만 가구
초과 예상

2022년 전국 미분양 주택 추이

(국토교통부, 단위: 가구)



이 때문에 상반기 중에 건설사와 금융 회사들의 연쇄 부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

건설사와 제2금융권에서 시작된 자금 경색으로 금융 시장 전체가 얼어붙으면서 일반 기업들의 자금난도 심각해지고 있다. 삼성전자·현대차·LG·SK 같은 대기업 집단들도 '비상 경영'을 선포하고 자금을 끌어들이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그래도 자금 부족이 심해지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거나 투자를 줄이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고용 축소와 투자 감축은 수요를 떨어뜨려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대기업들이 이력저력 자금을 모으고 있다면, 중소기업들은 자금난 때문에 부도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의 압박으로 은행들이 기업 대출을 늘리고 있지만, 대부분은 대기업 대출이고, 중소기업들은 그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7년 한계기업 수는 3111곳에서 2021년 3572곳으로 14.8퍼센트 증가했다. 한계기업은 '좀비기업'으로도 불리는데,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에도 못 미치는 기업을 말한다. 한계기업들의 부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가파르거나 부실해지고 있는 금융기관들에 타격을 줘 금융 시장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다.

별 효과 없는 금융 시장 안정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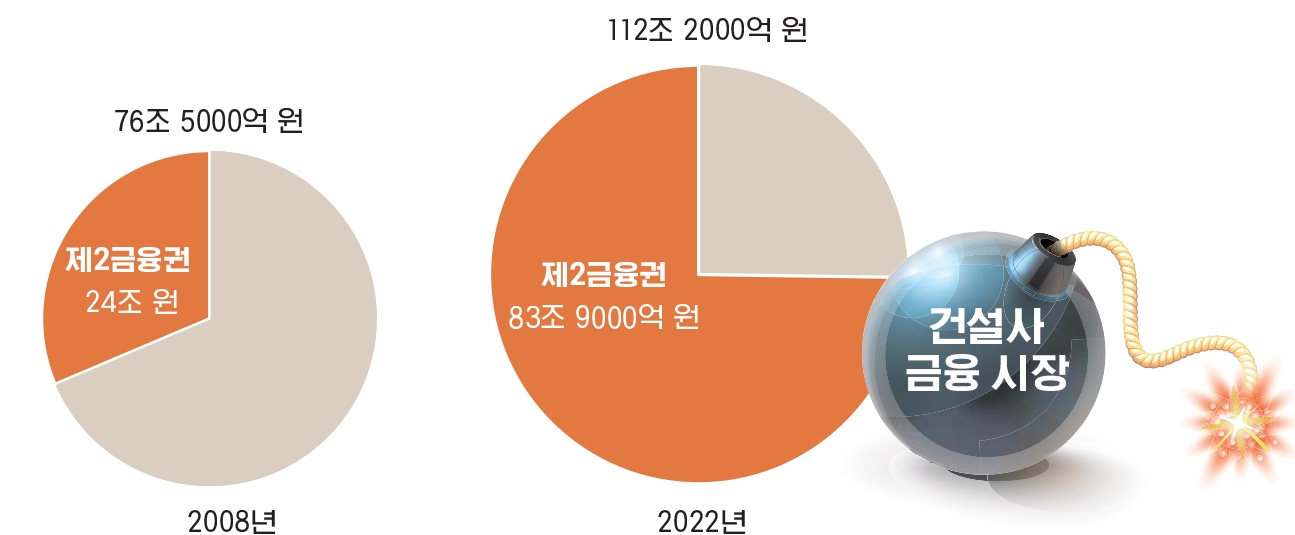
지난해 레고랜드와 흥국생명의 채무 불이행 등으로 금융 시장이 얼어붙자 윤석열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융 시장에 수십조 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정부는 금융 위기를 막기 위한 기업 지원을 강조했다. 금융 안정, 수출 지원 등을 위한 정책금융으로 54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여러 차례 계속된 정부 대책 발표 뒤에도 금융 불안정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 까닭은 정부나 한국은행이 금융 시장에 직접 돈을 투입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금융 안정 대책은 주로 시중 은행들을 동원해 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해 회사채나 부동산 개발 사업

제2금융권 중심으로 늘어난 부동산 PF 대출



에 투자한 PF 등을 매입하는 방안이다. 정부의 압박으로 5대 시중 은행은 지난 연말까지 95조 원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시중 은행을 동원한 정부 대책은 금융 불안정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당장 은행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은 은행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한다. 위기에 빠진 기업은 신용도가 낮은 기업인데, 은행들이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만 대출을 해 주고, 신용도가 높은 채권만 사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은행 대출이 시급히 필요한 중소기업들은 은행 대출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 은행도 무작정 대출을 늘릴 수는 없다는 딜레마에 봉착해 있

다. 정부가 자금이 은행으로 쏠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채권 발행이나 예금 금리 인상을 하지 말라고 은행들에 요구한 것이다.

결국 정부가 금융 시장에 돈을 투입하라고 은행들에 촉구하면서도 은행의 돈줄은 옥죄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이 무턱대고 대출을 늘리면 은행 자체의 안정성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실제 최근 은행들의 여유자금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다.

게다가 지방 은행들은 다른 금융기관이나 기업을 지원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부동산 PF 대출 비중이 높은 편이고, 수도권보다 지방 건설 사업에 대출한 경우가 많기 때

문이다.

이처럼 위기가 심각해지자 지배계급 내에서도 더 강력한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설사들은 미분양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매입해 달라고 요구했고, 금융기관들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직접 자금을 투입해 자금 경색을 해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와 한국은행도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자신들이 직접 자금을 공급하면 한국의 금융 불안정을 자인하는 게 돼 버려 진짜로 금융 위기가 터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한은이 시장에 유동성[자

▶ 10면으로 이어짐

기업 자금난 심화

건설사와 제2금융권 자금 경색 → 대기업 자금 조달에 매진

수요 하락 등 경제에 악영향 ← 자금 부족으로 투자·고용 축소



▶ 9면에서 이어짐

노동자 쥐어짜는 윤석열표 노동 개악

금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으면 외국에서는 사태를 심각하게 볼 것이다.”

이처럼 이렇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으므로, 앞으로 더 심각한 위기가 오면 지배계급 내부의 갈등도 더 커질 수 있다.

노동자 등 서민층 주머니 털어 기업 지원하기

경기 침체와 금융 위기 가능성이 커지자, 윤석열 정부는 기업 지원을 위해 노동자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노동·연금·교육 개악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까닭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중에서도 노동 개악이 먼저라고 했다. 노동 개악은 노동시간 유연화, 고용 유연화, 임금 체계 개편, 쟁의권 약화를 주된 목표로 하는데, 이는 모두 임금 억제로 연결된다. 그만큼 기업주들을 위한 비용 절감이 다급하고 절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 부양, 외국인 투자 유치, 수출과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각종 감세, 규제 완화도 강조했다.

예컨대,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중과세와 대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기로 했다. 또,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단인 민간 등록임대제도도 부활해 올해부터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도 장기임대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 시장의 추락 위기가 어른거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투기를 부추기는 셈이다. 거품을 키우는 위험한 방향이다. 게다가 금리 인상 상황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기업을 지원하고 부유층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정책은 공공서비스 축소와 복지 공격으로 이어진다. 대표적 사례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을 들 수 있다. 정부는 민간 기업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해야 한다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지난해보다 5조 원 넘게 삭감했다.

또, 국민연금 개악을 추진하면서 민간연금 시장을 확대하려 하고, 공공부문 인력 감축과 예산 삭감으로 공공부문 노동자와 공공서비스를 공격하고 있다.

정부의 이윤 시스템 보호는 공공요금

노동시간 유연화 :
사용자들 맘대로
연장근로

임금 체계 개편 :
임금 억제 및
총액 삭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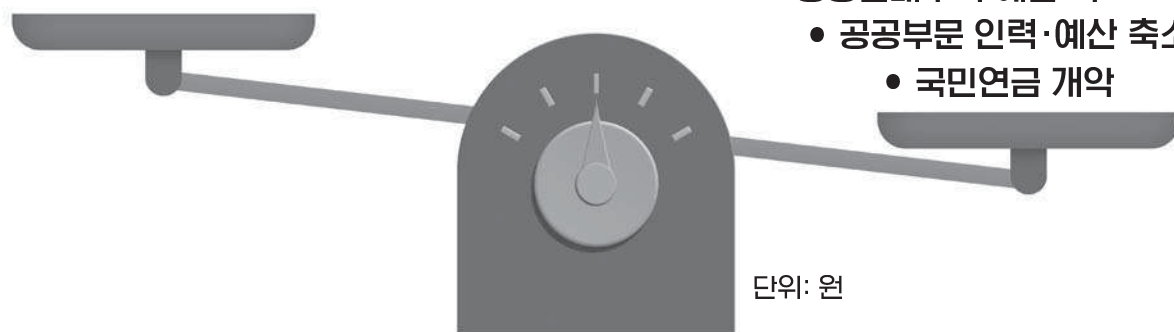
쟁의권 약화 :
노동자 투쟁 억누르기

기업 지원, 부자 감세 → 복지 축소로 이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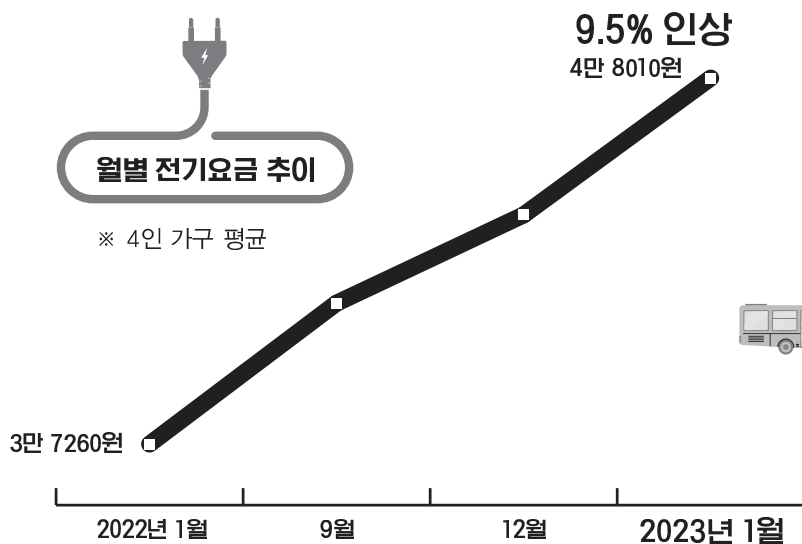
법인세 약 14조 감면
종합부동산세 약 6조 감면
기업 대규모 지원

대규모 복지 축소

- 공공임대주택 예산 약 5조 삭감
- 공공부문 인력·예산 축소
- 국민연금 개악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서민 생계 직격탄



가스 요금 가구당
최대 2만 원 인상 추진



서울지하철과
버스 요금도
300원 인상 추진

대폭 인상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 공공요금을 억제하지는 않고 서민 대중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다.

가령 정부는 한국전력의 적자를 메워야 한다고 올해도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1분기 전기요금을 또다시 9.5퍼센트(4인 가구당 4000원 이상) 인상했다. 이미 지난해에 18.6퍼센트나 올렸는데도 말이다. 가스 요금도 가구당 최대 2만 원 이상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서울지하철과 버스 요금도 조만간 300원 인상할 계획이다.

유가 급등 속에 감면해 줬던 유류세도 휘발유는 올해부터 리터당 99원 인상하고 경유 등은 올해 4월까지만 감면액을 유지할 예정이다.

이런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이다. 정부 자신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처럼 윤석열 정부와 기업주들은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 등 서민들이 치르게 하려고 악착같이 달려들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벌어진 생계비 위기와 구조조정·해고에 맞서, 금리 인하와 부채 탕감, 일자리·임금

방어를 위한 저항이 일어나야 한다.

이런 위기 시기에는 그나마도 적은 권익을 보존하려는 투쟁도 정부와 기업주들이 전면적인 공격으로 꺾으려 들 것이기 때문에, 투쟁을 전면화하는 게 중요하다. 경제적 요구를 내세운 다발성 투쟁들이 대정부 정치 투쟁과 만난다면 저항 확대에 결정적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정부를 굴복시켜 임금·복지·일자리를 지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각계급과 당하지 않도록 이간질을 물리치고, 투쟁이 확대되고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2월 31일 윤석열 퇴진 집회 소식

새해에도 윤석열 퇴진 운동은 계속된다

2022년의 마지막 날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집회 참가자들은 새해에도 운동을 이어 가자는 의지를 다졌다. 누그러진 날씨 속에 행진도 활기차게 진행했다.

이날 집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방과후학교강사지부 조합원들과 진도북놀이연구회의 풍물 공연으로 시작했다. 유주현 소리꾼의 노랫말은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할 이유를 말해 주는 듯했다.

“10·29 참사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 탄핵이 추모, 진정한 추모 / 퇴진으로 위로하세 ... 부자세 감면, 기업 비리, 퇴진 행진으로 막고 / 의료보험 축소, 한전 민영화, 촛불 행진으로 막아 내자 ... 원전 가동, 기후 위기 / 무능력 정권, 무책임 정부 ... 편파 보도 더 이상 절대 안 돼, 촛불 염원 보도하라.”

이날 집회에서는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한 윤석열의 호전적 대응을 규탄하는 구호와 발언이 강조됐다. “퇴진이 평화다”, “한반도 전쟁 조장 윤석열 퇴진!”, “니가 가라 총알받이! 전쟁광 윤석열 퇴진!” 등.

김준혁 한신대 교수는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일본의 재무장과 군국주의 행보에 협조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발언은 큰 호응을 받았다.

‘윤석열과 여당은 북한 무인기 사태에 호들갑 떨지 말라’를 헤드라인으로 내건 본지 447호와 호외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행진에서도 윤석열의 호전성을 규탄하는 발언에 큰 환호가 터져 나왔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분노도 여전했다.

무대 아래 참가자 발언에서 한 대학생은 윤석열이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이곳에서 그렇게 많이 죽었나” 하고 말한 것이 2022년에 가장 화났던 일이라고 말했다.

촛불행동은 이태원 참사를 2022년의 나쁜 뉴스 1위로 꼽았다. 참가자들은 “참사정권 패륜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 하고 외쳤다.(12월 30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2차 추모제를 열어 막말을 쏟아 내며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정부·여당을 규탄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 평화나무의 김용민 목사도 윤석열 퇴진 지지 발언을 했다. 김용민 박사는 기업과 재벌을 옹호하는 윤석열이 경제·안보 위기를



윤석열의 각종 공격에 맞서 윤석열 퇴진 운동을 더 키우고, 노동자 경제 투쟁과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구조조정과 노동자 해고로 돌파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집회 주최 측이 그와 함께 (윤석열 반대파라는 이유로) 우파 변희재를 함께 연단에 올려 발언 기회까지 준 것은 운동의 대의명분을 흐린 일로 부적절했다. 참가자들도 변희재 발언에 그다지 호응하지 않았다. 본지 취재 기자 옆에 있던 한 중년 여성 참가자도 “적과의 동침”이라며 불쾌해 했다.

퇴진 운동이 노동자를 포함한 서민 대중의 지지를 모아 힘을 강력하게 키웠을 때 여권이 그 대응을 놓고 분열하기를 기대할 수 있지, 실용주의적 책략으로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기대해선 안 된다. 그런 책략은 퇴진 운동의 정당성과 정체성을 흐려서 운동의 성장에 해를 끼치고, 오히려 우리 편의 분열을 부를 수 있다.

이날 집회의 백미는 “새해 소원이 윤석열 퇴진”이라고 소개한 김지윤 씨의 발언이었다.

“물가는 1997년 이래 가장 올랐고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치솟는 금리로 이자 부담에 허리가 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기, 가스, 수도 요금과 대중교통비까지 대폭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2023년을 노동, 연금 등 ‘개혁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은 저항을 분열시키려고 국가보안법을 이용하고 있다

내용을 뜯어보면 개악 종합 세트입니다. 노동시간은 늘리고 임금 총액은 줄이고, 연금과 건보료는 올리면서 보장은 축소하겠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윤석열을 권좌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우리 생명과 생계를 위협하는 자, 복지는 삭감하고 기업주 편만 드는 자, 제국주의 전쟁을 지원하고 기후 위기는 나 몰라라 하는 자, 이런 공공의 적에 맞서 함께 싸웁시다.”

김지윤 씨의 발언은 위기 상황에서 고통받는 노동자 등 서민들의 처지와

심정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참가자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진보당 서울시당이 집회 전부터 진행한 서울시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조례 서명운동도 지난주에 이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받았다. 이런 연결이 더 늘어야 한다.

윤석열은 “개악 종합 세트”를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의 개악 공세를 꺾어 우리 삶을 지키려면 더 큰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송년 촛불 참가자들이 결의를 다진 것처럼 2023년에도 윤석열 퇴진 집회를 힘차게 이어 가자.

공경에 처한 지배계급은 희생양을 찾는다. 1894년 간첩죄로 기소된 알프레드 드레퓔스 육군 대위는 당시 위기에 시달리던 프랑스 최상층 엘리트들에게 안성맞춤인 희생자였다.

드레퓔스는 유대인이었고 프랑스의 모든 숭고한 것을 더럽히는 “이방인”의 전형으로 악마화됐다.

그로부터 몇 해 전, 프랑스 지배층은 파나마 운하 건설과 연관된 거대한 부패 사건으로 신뢰가 실추됐다.

뇌물 공여에 연루된 많은 인물 중 두 명이 유대인이었다. 유대인 혐오적인 말과 글을 쏟아 내던 많은 언론과 정치인은 이러한 사실에 더 광분했다. 유죄가 자명해 보인 드레퓔스의 혐의는 이러한 유대인 혐오에 기름을 부었다.

비공개로 열린 군사 재판에서 재판부는 드레퓔스가 군사 기밀을 독일에 팔아넘겼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드레퓔스는 남아메리카의 악명 높은 유형지 ‘악마의 섬’으로 유배됐다.

당국은 해안선 길이가 3킬로미터가 채 안 되고 평균 폭이 400미터에 불과한 불모의 섬에 드레퓔스와 그를 감시할 경비병들만 빼고는 아무도 남겨 놓지 않았다. 드레퓔스는 돌 오두막에서 끊임없는 감시를 받으며 살았다.

국가의 심장부에 그런 반역 분자들이 있으니 지난 전쟁[보불 전쟁]에서 프랑스가 독일에 진 게 당연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드레퓔스 사건은 외부의 적을 내세워 국민을 단결시키고 1871년 파리 코뮌 노동자 반란의 기억을 더한층 약화시키는 데 이용될 수 있었다.

그 유죄 판결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드레퓔스에게 불리한 증거들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다. 처음에는 드레퓔스의 가족이, 나중에는 더 넓은 층의 지지자들이 당국의 공식 설명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여러 좌파와 몇몇 자유주의자가 드레퓔스를 옹호하고 나섰다.

비방

사회의 모든 부패한 부류가 일제히 드레퓔스의 유죄를 주장하며 드레퓔스 지지자를 매국노 쓰레기라고 헐뜯었다.

우파는 드레퓔스 석방 요구의 배후에 유대인, 사회주의자, 외국인들로 이뤄진 지하 “신디케이트”가 있다는 거짓 말을 퍼뜨렸다.

우파는 이 신디케이트가 판사들과 증인들을 매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군사 기밀을 유출하고, 그렇게



에밀 졸라 ‘나는 고발한다’ 발표 125년 드레퓔스 사건 — 위기를 부채질한 누명 씌우기

19세기 말 지독한 유대인 혐오가 낳은 부정의가 프랑스 사회를 둘로 갈랐다. 그리고 125년 전 1월, 소설가 에밀 졸라가 공개적으로 이 부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위커> 편집자 찰리 김버가 드레퓔스 사건의 정치학을 살펴본다.



‘나는 고발한다’가 실린 1898년 1월 13일자 <로로르>

해서 프랑스가 무방비해진 틈을 타 독일이 쳐들어올 기회를 제공하려 한다고 우파는 주장했다.

“만평가들은 반지를 끼고 시곗줄을 찬 채 사악한 표정으로 우쭐대는 똥똥한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 신디케이트를 의인화했다”고 역사가 바바라 터크먼은 전한다.

드레퓔스 사건은 1897년 여름부터 1899년 여름까지 2년간 프랑스 정치 생활을 지배했다. 훗날 총리가 되는 사회주의자 레옹 블룸은 이 쟁점을 두고 “진정한 내전”이자 “프랑스 대혁명 못

“계급투쟁의 원리는 부르주아지 내부에서 일어나는 조금이라도 중요한 모든 정치적, 사회적 갈등에 노동계급이 적극 개입할 것을 명령한다.”

지 않은 격렬한 인도적 위기”가 벌어졌다고 썼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번역되는 작가의 한 명인 소설가 에밀 졸라는 1898년 1월 13일 자유주의 신문 <로로르>를 통해 “나는 고발한다”는 제목의 4000단어짜리 글을 발표했다. 그 신문은 [평소의 10배인] 30만 부가 팔렸다. 일부는 군부 지지자들이 거리에서 불태우려고 산 것이지만 말이다.

졸라가 많은 유력 인사를 실명을 들먹이며 공격하는 대담한 방식으로 기사를 썼기에, 여기에 거론된 인사들은 졸라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걸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드레퓔스 사건이 대중적으로 다시 관심받게 됐다.

에밀 졸라는 이렇게 썼다. “나는 비오 장군을 고발한다. 그는 드레퓔스의 결백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고도 정치적 동기와 총참모부의 체면을 지키려는 의도로 이를 은폐했다.

“나는 부아데프르 장군과 공스 장군을 공범으로 고발한다. 부아데프르는 의심할 바 없이 종교적 편견의 발로로, 공스는 아마도 육군성을 불가침의 성역으로 만들려는 조직 보위 정신의 발로로 그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에밀 졸라는 누가 진정한 간첩범인지를 지목하고 “우리 시대의 사회악, 즉 ‘추잡한 유대인’이라는 강박 관념”을 강력히 규탄했다.

졸라의 기사는 드레퓔스 사건을 국제적 사건으로 만들었고, 졸라는 그가 바랐던 대로 수많은 소송장을 받게 됐다. 역풍이 어찌나 격렬했는지 졸라는 금세 명예훼손으로 형사 기소됐고, 구속을 피하기 위해 영국으로 망명해야 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군부가 드레퓔스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다.

사회 운동

‘인권 동맹’이라는 거대한 사회 운동이 프랑스 전역에서 대중 집회를 열었다.

인권 동맹은 드레퓔스 석방을 위한 대중적 청원 운동을 벌였고 모든 사람

▶ 13면으로 이어짐

▶ 12면에서 이어짐

이 여기에 이름을 올릴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선택에 직면했다. 온 마을 사람이 청원서에 서명하는가 하면 어떤 마을은 전원이 서명을 거부했다.

거리에서 성장하는 운동의 압력으로 1899년 말재심 군사 재판이 열려 드레퓔스는 ‘악마의 섬’ 감옥에서 나오게 됐다.

그러나 재심 법정은 논란을 무릅쓰고 기존 유죄 판결을 되풀이했다. 드레퓔스의 무죄를 인정했다가는 군부가 뒤흔들릴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태가 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드레퓔스를 사면했다. 드레퓔스의 결백이 완전히 인정되기까지는 여러 해가 더 걸렸다.

드레퓔스 사건은 사회주의자들을 분열시켰다. 이것은 유대인 혐오에 대한 태도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 연루된 계급 세력들에 관한 것이었다.

쥘 게드는 “사회주의, 오직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했다. 게드는 드레퓔스 사건이 지배 집단들 사이의 다툼일 뿐 사회주의자들에게는 아무런 중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배자들 사이의 차이가 무엇이든간에 결국 사건의 모든 중심 인물은 파리 코뮌을 분쇄한 군부의 일부라고 게드는 주장했다.

주요 노조 활동가들과 몇몇 아나코-신디컬리스트는 이 모든 사태가 부르주아지의 속임수이자, 중요한 문제에서 주의를 돌리려는 수작이라고 여겼다.

“사회주의자의 부르주아 정부 입각은 혼한 생각과 달리, 사회주의자가 부르주아 국가를 부분적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다. 부르주아 국가가 사회주의 정당을 부분적으로 정복하는 것이다.”



1895년 1월 5일 드레퓔스의 해임식 현장을 그린 그림. 프랑스 지배계급은 사회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해 드레퓔스를 간첩으로 몰았다

그러나 또 다른 저명한 사회주의자 장 조레스는 노동자들이 모든 민주주의 문제와 씨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 장군들의 전횡으로, 군대에서 자행되는 미화된 폭력으로 가장 위협받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누구냐고? 바로 노동계급이다.

“따라서 노동계급은 군사 법정의 불법 행위와 폭력이 모두가 인정하는 관례가 되기 전에 이를 처벌하고 막는 데 최우선의 이해관계가 있다.”

조레스는 지배계급을 약화시키는 데 사회 상층부의 분열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장 조레스는 폴란드계 독일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의 지지를 받았다. 룩셈부르크는 초기 저작에서 이런 점을 주장했다. 어떤 면에서 룩셈부르크의 주장은 몇 년 후 러시아 혁명가 블라디미르 레닌이 제시한 바를 예시한다.

룩셈부르크는 이렇게 썼다. “계급투쟁의 원리는 부르주아지 내부에서 일어나는 조금이라도 중요한 모든 정치적, 사회적 갈등에 노동계급이 적극 개입할 것을 명령한다.”

룩셈부르크는 드레퓔스 사건이 “군국주의, 배외주의-민족주의, 유대인 혐오, 교회의 힘”과 연루된 문제라고 봤다. 룩셈부르크는 “이런 적들과의 투쟁에 나서지 않는 것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리고 “노동계급의 적인 군국주의

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모든 창끝이 이를 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또한 룩셈부르크는 사회주의자가 드레퓔스 사건에 관해 선동할 때 “사회주의자를 운동의 다른 분파들과는 구별시켜 주는 뚜렷한 성격의 계급투쟁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혁명가는 단지 노동조합 활동가가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호민관이 되어야 한다는 조레스와 룩셈부르크의 지적은 옳았다. 억압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릴 뿐 아니라 노동계급의 단결을 해치는 무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드레퓔스 사건을 둘러싼 사회주의자들의 논쟁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입각

“나는 고발한다”가 발표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보수 정당 소속의 총리가, 조레스를 지지하는 사회주의자인 알렉상드르 밀랑에게 각료직을 제안했다.

총리는 이것이 드레퓔스 사건을 끝내고 새 정부에 대한 지지를 넓힐 최선의 방안이라고 여겼다. 밀랑의 입각은 파리 코뮌의 학살자 갈리페 장군을 전쟁 장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한 “균형 잡기”가 될 터였다.

이것은 사회주의자가 공공연하게 자본가를 대변하는 정부에 입각한 최초 사례였고, 이는 다시 좌파를 날카롭게 분열시켰다. 조레스는 밀랑의 입각이

드레퓔스 사건의 논리적 귀결이자, 자본가와 노동자가 공동으로 사회를 지배하는 과도적 단계를 나타낸다고 이를 옹호했다.

그러나 룩셈부르크는 유럽 사회주의 운동의 몇몇 최고 이론가와 논쟁을 벌이며 조레스의 주장을 반박했다. 룩셈부르크는 정부의 계급적 역할은 인사 교체로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사회주의자의 부르주아 정부 입각은 혼한 생각과 달리, 사회주의자가 부르주아 국가를 부분적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다. 부르주아 국가가 사회주의 정당을 부분적으로 정복하는 것이다.”

이는 훗날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휩싸이게 되는 ‘개혁이나 혁명이나’를 둘러싼 논쟁을 예고했다.

거의 모든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부르주아 국가에 적응했고, 1914년 제1차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자국 지배계급을 편들며 다른 나라 노동자에 대한 학살을 지지했다.

밀랑에 대한 룩셈부르크의 경고는 전적으로 옳았다. 밀랑이 참여한 정부는 드레퓔스를 감옥에 가게 한 자들의 기소를 거부했다. 밀랑은 그런 정부를 급진적으로 보이게 포장하는 구실을 했다.

밀랑은 정의에 대한 요구를 내던짐으로써 정부에 남은 대가를 치렀다.

출처 Charlie Kimber, “The Dreyfus case — a setup that fuelled a crisis”, (Socialist Worker, 2023. 1. 1) / 번역 김재현



신간 소개 | 《정체성 정치와 남녀 대립적 페미니즘 —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정진희 쓰고 엮음)

한국의 페미니즘과 정체성 정치를 논쟁적으로 다룬 책

2015년 한국에서 페미니즘이 다시 부상하고 시간이 다소 흘렀다.

페미니즘의 부상은 한국 사회 구조에 아로새겨진 체계적 여성 차별에 대한 정당한 반감의 표출이었다.

2018년 불법촬영 항의 운동(“불편한 용기”)과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로 여성운동은 그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며 페미니즘 사상과 실천이 가진 모순과 난점도 드러났다. 여성 차별에 반대하고 성평등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 왔지만, 페미니즘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늘었다.(비록 대부분의 비판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지만 말이다.)

그동안 여성운동과 페미니즘 논쟁에 개입하며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으로 예리한 글들을 써 온 <노동자 연대> 신문 정진희 기자가 최근의 페미니즘 부흥과 굴곡을 돌아보는 신간 《정체성 정치와 남녀 대립적 페미니즘 —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을 발표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비판적 지지 입장을 취한다. 여성 차별에 대한 반대와 그 운동을 뜻하는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지하면서도, 한국 여성운동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남녀 대립적 페미니즘(흔히 급진적 페미니즘으로 불린다)에 대해서는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날카롭게 비판한다.

저자는 2018년에 일어난 불법촬영 항의 시위에 직접 참가하며 취재했는데, “한국 역사상 최초의 대중적이고 전투적인 여성운동”이라는 이 운동의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그 운동의 약점도 짚는다. 당시 대부분의 좌파가 그 운동 지도부의 분리주의를 문제 삼으며 그저 밖에서 비판만 하거나 아예 무시한 것과 대조된다.

이 책의 장점은 한국의 운동 내에서 받아들여지는 페미니즘의 사상(과 정체성 정치)에 대해 매우 날카롭고 선명하게 비판하면서도 그 비판이 균형 잡혀 있다는 것이다. 우파의 페미니즘 공격에는 단호히 반대하면서 페미니즘 사상의 모순과 난점을 살펴본다.

장점

한국에서의 경험과 논쟁을 구체적·정치적으로 살피면서 이론적 비판을 결합시키고 있어서, 깊이가 있으면서도 흥미진진하고, 어렵지 않게 읽힌다. 대안을 명확하게 제시한다는 점도 장점이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페미니즘 등에서 상식처럼 여기지는 정체성 정치와 그 변형인 교차성 개념을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다룬다.

정체성 정치와 교차성 개념이 언제 어떻게 등장해서, 왜 차별 반대 운동에서 유력해졌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것의 장점과 약점을 분석한다.

특히, 교차성 개념이 정체성 정치의 대안으로 언급되는 상황에서 교차성 개념이 정체성 정치와 완전히 단절하지 못했고, 유사한 난점을 공유한다는 지적은 독자의 인식의 지평을 넓혀 준다.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노동계급의 관점”에서 차별을 설명하고 그에 맞선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명료하게 설명한다.

두 번째 부분은 구체적으로 페미니즘 ‘백래시’, ‘이대남’ 논쟁과 젠더 갈등, 정의당의 페미니즘, 불법촬영 항의 운동, 젠더 거버넌스, 신지예의 윤석열 캠프 합류 소동 등 페미니즘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과 민감한 쟁점들을 다룬다.

이 쟁점들에서 그동안 여러 까다로운 물음들이 제기돼 왔다.

가령 ‘이대남 대 이대녀’ 구도는 존재하는가? 아니면 젠더 갈등은 그저 성 차별주의자나 우파가 기획한 허구적 담론일 뿐인가? 오늘날 젊은 여성은 더는 차별받지 않는가? 남자도 차별받는 것 아닌가? 위마드만 문제인가? 신지예의 윤석열 캠프 합류는 단지 개인적 이탈인가? 등.

이 책은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요모조모 살피며 이런 물음들에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고, 교훈을 이끌어 낸다.

우파의 안티 페미니즘 공격에 단호하게 반대하면서도 남녀 대립적 페미니즘이 갖는 난점을 지적하고 대안적 사상과 전략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정체성 정치와 남녀 대립적 페미니즘 — 마르크스주의적 비판

정진희 쓰고 엮음, 책갈피, 274쪽, 14,000원

세 번째 부분은 트랜스젠더와 페미니즘을 다룬다.

트랜스젠더 문제는 트랜스 여성의 숙명여대 입학 포기 사건,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과 죽음 사건 등을 거치며 한국 사회와 한국 페미니즘 안에서 중요한 쟁점이 됐다.

트랜스젠더를 배척하는 분리주의 페미니즘의 주장을 낱알이 반박하면서도, 기존 페미니즘 주장의 한계도 지적한다.

지난 몇 년간 뜨겁게 일어난 여성운동과 논쟁을 돌아보며 대안적 사상과 전략을 설명하는 이 책은 차별이 원천적으로 사라지는 진정한 평등 사회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많은 이들에게 읽히길 바란다.

성지현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workersolidarity.org/what-we-stand-for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wspaper.org/subs2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f 노동자 연대 @wspaper
wspaper.org 노동자연대TV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 “노동자 연대” 검색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wspaper.org/online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구독하세요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구독하세요**



채널 바로가기

-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토론회 영상
- 주요 시사 이슈 10분 정리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 투쟁 취재 영상
- 왓시즘 강연 음원

총 4700여 개 콘텐츠

구독하시면, 지금 딱 보기 좋은 영상/음원을 추천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창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다영코리아 현재호 등록번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팩스: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wspaper.org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02

미국 하원의장 선출 실패에서 드러난 공화당의 위기

사라 베이츠

미국 정치인들이 하원의장을 선출하지 못하면서 미국 정치가 새로운 위기에 빠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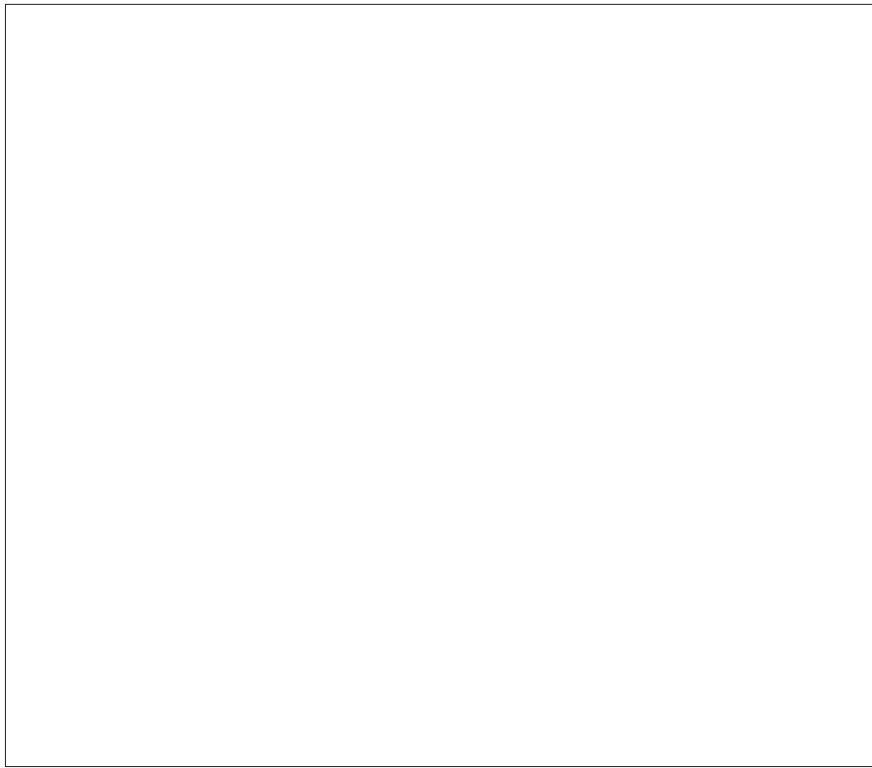
공화당 원내대표인 케빈 매카시는 지난 1월 4일까지 여섯 차례의 투표에서 연달아 과반을 얻지 못했다. 처음에는 19명, 이후에는 20명의 공화당 극우파 의원이 연합해 반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이는 뻔뻔한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장악한 공화당이 분열하고 있다는 징후다. 공화당은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하원을 장악했지만, 지금은 그들끼리 싸우고 있다. 매카시는 트럼프를 지지했던 골수 우파이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매카시가 충분히 우익적이지 않다고 여긴다.

하원이 1차 투표에서 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것은 1923년 이래 처음이다. 1월 3일 1차 투표는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가 소수당 대표임에도 매카시보다 더 많이 득표하는 난맥상을 보였다.

이 혼돈은 한때 자유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떠받들어졌던 미국 정치 제도가 직면한 더 심각한 위기의 징후다. [바이든이 트럼프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한 후] 지난 2년 동안 극우는 국회의 사당을 공격했고, 트럼프는 대선 결과를 부정했으며, 공화당원들은 “선거를 도둑맞았다”는 믿음을 이어왔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미국 민주주의가 “전혀” 작동



곤혹스러워하는 케빈 매카시 극우파 의원들의 반란표는 공화당의 분열을 보여 준다

하지 않고 있거나 “잘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52퍼센트나 됐다.

하원의장은 단순히 형식적인 직책이 아니다. 미국 정치 최상층에 속한 지위이며, 대통령 궐위 시 부통령에 이어 2순위로 대통령 권력을 승계받을 수 있는 자리다.

하원의원들은 앞으로도 의장을 선출할 때까지 투표를 계속해야 한다. 이러한 교착 상태로 인해 하원의 일상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 수백 명의 의원들이 아직 취임도 못했고 입법 업무도 처리되지 못했다.

매카시는 의장이 되기에 충분한 표를 확보할 때까지 20명에 달하는 반란

의원들과 맞대결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는 두 번째 투표에서 패한 직후 세 번째 패배를 앞두고 이렇게 선언했다. “우리가 이길 때까지 버틸 것이다. 나는 그 길을 안다.”

공화당 극우파 의원 맷 게이츠는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장기전을 벌일 태세가 돼 있다”고 선언했다. 동료 공화당 극우파 의원인 로렌 보버트는 이렇게 말했다. “매카시로부터 새로운 얘기를 듣지 못했기에, 우리는 계속 하던대로 할 것 같다.”

매카시 반대파는 매카시에게 연방 예산의 균형을 유지하고, 엄격한 긴축 정책을 펴고, 정부 지출에 대한 하원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매카시는 이미 핵심 요구 하나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는 의원들이 연방 복지 예산을 삭감하거나 연방 공무원을 해고하거나 급여를 삭감하는 입법을 할 수 있게 하는 “휴먼 규칙”을 되살리는 데 동의했다고 한다.

매카시에게는 동맹이 없지 않다. 트럼프는 1월 4일 트위터로 매카시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트럼프는 “어젯밤 정말 좋은 대화가 오갔다. 이제 우리의 위대한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매카시에게 투표할 차례”라고 썼다.

그러나 매카시가 반란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매카시 밑에서 원내총무를 맡아 온 루이지애나주 선거구 의원 스티브 스컬리스에 기대를 걸 가능성이 높다.

이 위기는 공화당 내부의 깊은 분열이 심화하면서 격동의 2년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사건일지도 모른다. 단지 9석 차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 상황이 소수 강경파에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악행을 지적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염원을 실현시켜주지 못했다. 이런 위기는 경제위기가 심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계속되는 코로나 위기가 조용히 목숨을 빼앗고 있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 진정한 희망은 의회 밖 노동계급의 투쟁에 있다.

출처 Sarah Bates, “US speakers vote shows crisis of republican party” (Socialist Worker, 2023. 1. 4) / 번역 김동욱

이란 정권의 시위 탄압에도 파업이 벌어지다

닉 클라크

2022년 12월 31일 이란 최대 정유소인 아바단 정유소에서 일부 석유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다. 다른 지역에서는 노동자들이 시위에 참여했다. 파업은 정권의 권위주의 통치에 반대하는 시위와 함께 벌어지고 있다.

아바단 정유소의 계약직 노동자들은

임금 요구를 걸고 보수 작업과 안전 점검 작업을 거부했다. 이들은 본사 앞에 모여 연좌 농성을 벌였다.

아살루예, 마흐샤흐르, 텡 비자르, 가치사란, 제지자 카르크, 아흐바즈, 마흐무드 아바드의 석유 노동자들도 시위에 나섰다.

이처럼 이란 노동자들은 종종 이란 반정부 운동의 주요 시위 일정에 맞춰

일련의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란 반정부 시위는 지난해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머리 가리개 착용을 강제하는 법에 반대하는 것에서 시작해 빠르게 정권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성장했다. 정부와 군경은 대체로 탄압으로 대응했다.

2022년 12월 31일 군경은 이란 쿠르드족 지역의 도시 자반루드에 모인 수

천 명의 장례 행렬에 총격을 가했다. 이 장례식은 시위 도중 사망한 7명의 장례식이었다. 시위를 막으려고 이란혁명수비대 군인들이 도시의 거리를 순찰하고 수색했다고 쿠르디스탄 인권 네트워크는 보도했다.

출처 Nick Clark, “ Strikes as regime cracks down on protest in Iran” (Socialist Worker, 2023. 1. 2) / 번역 박이랑



전기·가스·수도·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중단하라

올해 들어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전기 요금은 지난해 20퍼센트가량 인상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 9.5퍼센트 인상됐다.(4인 가구당 4000여 원) 1년 새 무려 30퍼센트나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평균 한 달 전기 요금은 부가세를 포함해 5만 7000원대에 이르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한전 적자를 메우려면 전기 요금을 킬로와트시당 51.6원(4인 가구 기준 1만 5350원) 인상해야 한다고 공언해 왔기 때문에 향후 전기 요금은 더욱 올라갈 것이다.

가스 요금은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무려 38퍼센트 인상했는데, 산업자원부는 올해 가스 요금을 지난해 인상분의 1.5배에서 1.9배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초보다 두 배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떠넘기기

이처럼 정부가 나서서 한전과 가스공사 적자를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기자 각 지자체들도 덩달아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4월 말경부터 300원씩 인상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와 여야가 올해 예산에서 지하철 노인 무임 승차 지원을 하지 않자 서울시장 오세훈은 곧장 그 비용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나섰다. 서울지하철 요금 인상은 전체 인구의 과반이 사는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이외에도 택시 요금, 상하수도 요금, 종량제 쓰레기 봉투 요금 등의 인상이 여러 지자체들에서 추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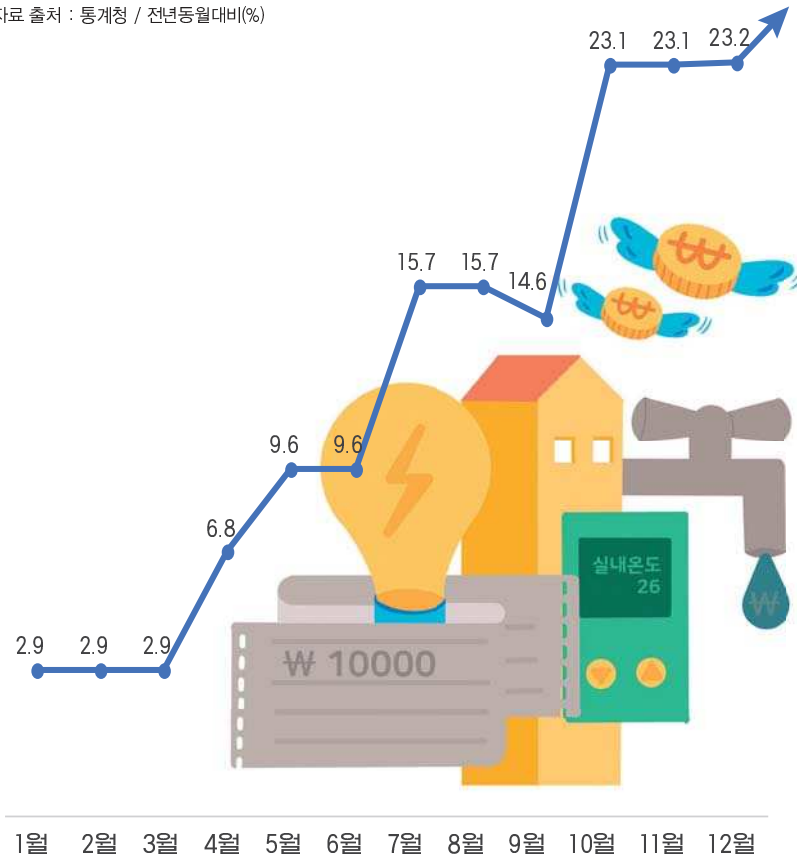
이와 같은 공공요금 인상은 올해 물가 인상을 이끌 핵심 요소이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올해 물가가 3.5퍼센트 오를 것이라고 했는데, 공공서비스 인상이 가장 큰 요인을 차지했다.

공공요금 인상은 정부의 긴축 공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정부는 기업과 부자를 위해서는 막대한 감세 혜택을 주면서 공공서비스 요금을 낮추기 위한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

2022년 전기·가스·수도 소비자물가 증가율

자료 출처 : 통계청 / 전년동월대비(%)



특히 지난해 에너지 가격 인상 속에 한전과 가스공사 등의 적자가 크게 늘었지만 정부는 재정 지원은 하지 않았다. 되레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예산은 지난해 2306억 원에서 올해 1910억 원으로 17퍼센트 줄어들었다.

반면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정유사와 민간 발전 기업은 막대한 수익을 거뒀고, 정부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기 요금 수조 원을 할인해 주고 있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들어가는 돈을 서민 주머니를 털어 뜯어 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평범한 사람들의 불만은 상당하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들에서 불만을 성토하는 글들이 올라온다. “월급 빼고는 다 올라요. 이번 정부는 서민 다 때려잡으려고 작정했나요.” “물가가 장난 아니다. 이런 못된 정부가 다 있나.”

지난해 국제적으로 석유·가스 가격

이 인상되자 기업들이 비용 증가를 상품 가격 인상으로 메우며 물가가 크게 올랐다. 이 때문에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삭감됐다. 올해는 아예 정부가 나서 공공요금을 올리고 있으니 이에 대한 반감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불만을 대변해 저항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정의당과 노동당은 이제까지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반대하지 않아 왔다. 기후 위기를 해결하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지가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평범한 사람들이 쓰는 전기·가스 요금을 올리는 것은 기후 위기 대응에 효과가 없고, 기업과 정부에 맞서 대중운동을 건설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해악적이다. 이런 운동 진영의 약점은 정부가 전기·가스 등의 요금 인상을 이렇게 급격하게 추진하는 데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다.

반갑게도 최근 진보당은 회피적인 기존 입장을 바꿔 공공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진보당은 서민을 위해 전기·가스 요금 동결, 에너지 재난지원금 10만 원 한시적 지급, 에너지 바우처 대폭 확대를 요구했고, 대신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기업특혜 폐지, 에너지 기업에 대한 횡재세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커져야 한다. 동시에 공공요금 인상에 맞서는 대중적 투쟁이 전진해야 한다.

정선영

온라인 토론회

노동자연대 TV

한반도 긴장은 북핵 때문인가?

1월 11일(수) 오후 8시

참가신청 bit.ly/0111-meeting

발제 **김영익** <제국주의론으로 본 동아시아와 한반도> 공저자

▶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02-2271-2395, 010-4909-2026 (문자 가능)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